

위기에 몰린 대학원생, “박사과정 진학 무의미”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본격적으로 감액된 R&D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다. R&D 예산 삭감은 지난해 정부 발표로 단행됐다. 이어 작년 말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R&D 예산은 총 26조 5천억 원. 작년에 비해 4조 6천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이는 과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삭감 파장은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 신문은 R&D 예산 감축 과정을 되짚어 보고, 당장 우리학교 연구실에 미친 영향과 연구실이 체감하는 분위기, 그리고 대학원생의 생각을 알아봤다.

4조 6천억 삭감 편성부터 확정까지

R&D 예산 삭감 배경은 작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작년 3월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편성 지침에는 주요 예산 투입 분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도 포함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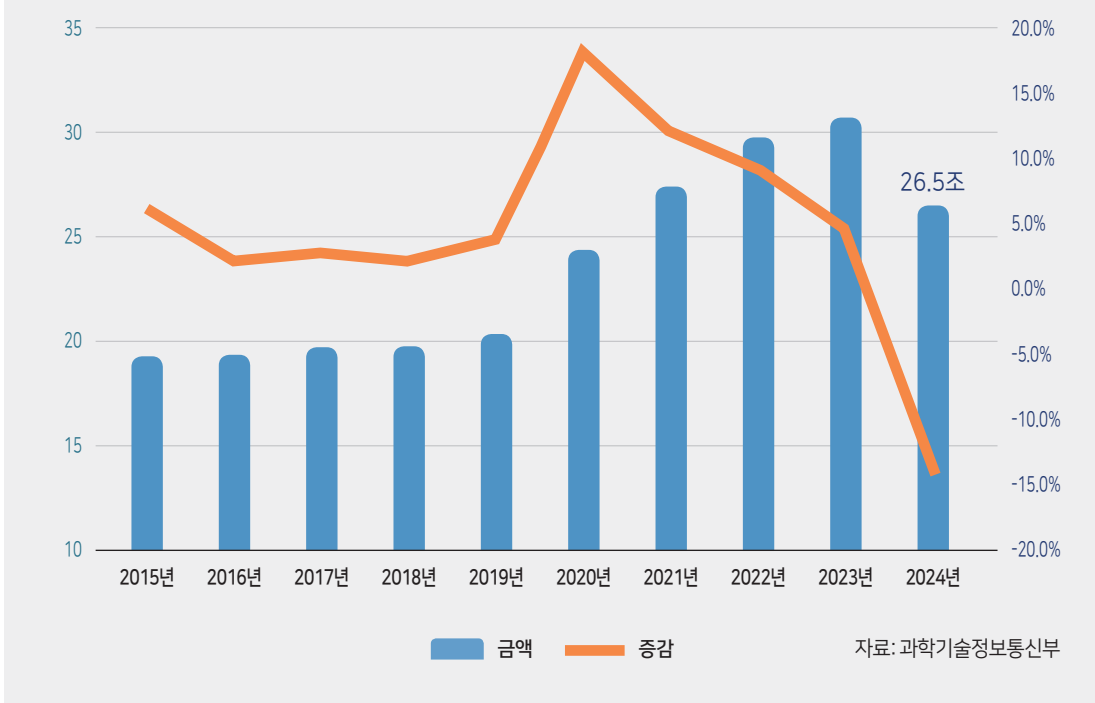
그런데 7월이 되자, 기재부는 각 정부 부처에 예산요구서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었다. 8월 말까지 국회로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R&D 예산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그렇게 정부는 기존보다 13.9% 축소된 주요 R&D 예산 삭감을 발표하며 삭감 배경으로 ‘연구 효율화’와 ‘카르텔적 요소 철폐’를 강조했다. 이는 곧 교육부 예산에도 반영돼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R&D 예산이 26.5%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과학계와 대학가는 반발했다. 과학기술 분야 단체들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결성했고, 전국 주요 대학 유관 학과가 모여 ‘천문·우주 항공 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우리학교 우주과학과 학생회도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이후 학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국회 방문, 예산 재검토 촉구 등을 통해 대응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작년 9



10년 간 국가 R&D 예산 (단위: 조 원, %)



국가 R&D 예산은 199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삭감됐다.

(사진=대학주보DB)

월이 되자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는 이를 심의한 후 그해 12월 20일 수정된 안을 확정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R&D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6천억 원 증액된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의 삭감 기조가 유지된 것이었다. 확정된 예산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은 다행”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현실이 된 예산 삭감 위기에 몰린 대학원생

이는 우리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가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크게 절감하는 변화는 인건비다. 국제캠퍼스 이공계열 학과 대학원 연구생 A씨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에 “당장 들어오는 월급의 반절 이상이 날아갔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나 장비 재료비가 삭감됐고 앞선 저연차 성과가 우수해도 일괄적으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대학원생 B씨도 “우선 일차적으로 인건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과제를 받지 못해 인건비가 더 삭감될 것으로 보인

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예산 삭감이 일어나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라며 “거의 모든 연구실 인건비가 삭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환경도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실험장비와 재료비, 출장 지원 등의 감소로 연구원들이 정상적인 연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A씨는 “장비 재료비가 삭감됐다”며 “반 정도 삭감된 과제는 중도 포기하고 신규 과제 따내려는 연구실도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장비 구매, 대여는 어려워져 본인 사비를 털어서

까지 추가실험을 진행한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밝혔다. B씨도 이와 관련해 “실험 기구와 장비들을 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며 연구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는 연구자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자로 남아 있느니, 차라리 당장 취업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B씨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박사과정을 포기하기로 했다. B씨는 “석사를 이번에 졸업하고 박사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삭감으로 인해 출장도 사비로 내고 가야 하고 인건비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실험 기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사과정 진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어 “이번에 그냥 취업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진로 계획 변화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전국 주요 대학 유관 학과 학생회가 R&D 예산 삭감에 대응해 전국 대학 유관 학과 소속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공동 입장문에 “설문 결과, 이번 정책이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이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생이 76.3%, 대학원생이 92.1%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박사과정을 포기한 B씨와 같은 처지인 학생이 실제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정 건전성과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친 정부 의도와는 달리, R&D 예산 삭감 여파는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이자 연구 말단에서 고생하는 대학원생의 희생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사태로 영향을 받는 A씨는 “할 일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줄어 안타깝다”며 “빨리 졸업하고 떠날 생각뿐”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R&D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부의 인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순수과학 분야에 관해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저성과 연구 확대에 대해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만 취하기 위해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미래의 노벨상을 받을 여지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